

국가전략연구위원회 이슈브리핑 36호 (발간일: 2025. 8. 29.)

# 트럼프 행정부의 MAGA경제노선과 사이버안보정책에의 영향

임해용(성신여대)

## 1. MAGA 운동의 부상과 사이버안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로 두 번째이자, 미국 공화당에서는 최초로 3연속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며, 공화당의 이념은 이제 트럼프주의와 동의어가 되었다(The Economist, July 20th 2024, p. 31). 트럼프 1기는 전통적인 미국의 방향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했지만, 전체 국민투표와 모든 경합주(swing states)에서 확실하게 승리한 트럼프의 2기의 등장으로 트럼프현상은 미국 정치의 새로운 정상성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의 선거구호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운동의 후계자로 인정받고 있는 40세의 젊은 밴스(JD Vance)가 부통령이 됨으로써, 트럼프 2기 이후에도 트럼프주의는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MAGA의 영향력은 2기에 들어서 안보 관련 분야에서 인사와 예산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MAGA 인플루언서의 조언을 듣고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에 소속된 직원 6명을 해고하였다고 보도하였다.<sup>1)</sup>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1) 뉴욕타임스, 2025년 4월 3일 기사, "Trump Fires 6 N.S.C. Officials After Oval Office Meeting With Laura Loomer,"  
<https://www.nytimes.com/2025/04/03/us/politics/trump-meeting-laura-loomer.html>  
(검색일 2025년 4월 3일)

는 1기에 국토안보부 산하에 자신이 만든 CISA(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의 2026년도 예산에서 미화 4억 9천백만달러를 삭감하였다(Foreign Policy, May 2). 현재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는 1기와는 달리 사이버안보를 강화하기 보다는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의 결과 불복을 지지하지 않았던 기관들을 무너뜨리는(dismantling)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CISA는 2020년 선거 관련 보안은 어느 때보다 최고였다고 주장하면서 트럼프의 부정선거론에 동조하지 않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최근 CISA의 수장을 교체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그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헤리티지 재단에서 공화당행정부의 집권을 전제로 정책 어젠다를 집대성한 Project 2025에서 CISA는 진보세력에 장악되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CISA의 예산과 자원은 부서 이동이 필요하다 언급되고 있다(Project 2025, p.155)

MAGA의 영향력은 관세분야를 통해 경제분야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통상 MAGA경제노선(MAGAnomics)으로 지칭된다. MAGA운동이 트럼프를 세 번이나 공화당 후보로 선출되게 하고 두 번이나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하였으며, 이제 재집권하게 된 트럼프행정부의 MAGA경제노선은 선거캠페인에서 자신들이 약속한 것들을 지켜야 할 입장에 서게 되었다. MAGA경제노선은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정책에 전 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MAGA경제노선이 사이버 안보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들여다보고자 한다. 먼저, 트럼프의 MAGA경제노선의 내용을 먼저 정리한다. 그리고 트럼프 1기의 경제정책이 사이버안보정책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하고 현재 2기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끝으로 MAGA경제노선과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사이버안보정책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MAGA경제노선의 현황과 분파

트럼프의 MAGA정치가 공화당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 배경에는 경제적으로는 세계화에 대한 불만의 오래된 누적과 이념적으로는 진보 정치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환멸과 집중 반격이 그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중선동주의(populism)로 비판받는 트럼프의 MAGA정치는 권위주의통치와 친화적으로 인식되고 미국의 전통적 자유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sup>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MAGA운동이 성공한 경제적 배경에는 기존 주류 경제학의 현실 문제 해결 실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신고전학파(neoclassical) 경제학에서 근로자들은 경제 모델에서 주요 행위자가 아니라 글로벌리즘과 문화적 유랑(cultural displacement) 사이에서 투쟁하고 있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그려지고 있다.<sup>3)</sup> 신고전학파 경

2) Bálint Madlovics and Bálint Magyar, Why America Won't Become Hungary Trump, Musk, and the Limits of MAGA Autocracy, *Foreign Affairs*, Feb 10, 2025,

3) Antara Halder, Feb 10, 2025, What is MAGAnomics?, Project Syndicate

제학 모델에서 종속적인 존재로서 양당합의하에 장기간 추진된 세계화로 인해 피해를 본 그들의 집합적인 불만이 트럼프를 통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노선은 트럼프경제노선(Trumpnomics) 등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트럼프 1기에 행정부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의 수장인 Mick Mulvaney는 트럼프경제노선보다는 MAGA경제노선(MAGAnomics)로 불리달라고 하였다.<sup>4)</sup> 멀베이니는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MAGA경제노선에 대해 설명하였다.<sup>5)</sup> 트럼프 1기의 MAGA경제노선은 연평균 3%의 경제성장에 대한 약속을 골자로 미국인의 부와 기회의 증가와 함께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세제개혁(tax reform), 불필요한 규제개혁(curbing unnecessary regulations), 복지개혁(Welfare reformation), 스마트 에너지전략 (smart energy strategy), 미국 인프라재건(Rebuilding America's infrastructure), 미국을 위한 공정무역(Fair trade for America), 정부지출규제(Government spending restraint) 등을 골자로 한다.

|         | 워싱턴 컨센서스<br>(1980년대후반- 2016) | MAGA경제노선<br>(트럼프 1기, 2기)      | 바이든 경제노선<br>(Bidenomics)<br>바이든 행정부                       |
|---------|------------------------------|-------------------------------|-----------------------------------------------------------|
| 시장접근법   | 개방, 통합 자유화,<br>민영화,          | 보호무역주의,<br>자국산업보호             | 대중국관세유지                                                   |
| 외국인직접투자 | 오프쇼어링<br>(offshoring)        | 외국자본 유입: 리쇼어링: 보조금 지급 축소      | 리쇼어링(Reshoring - IRA / Chips and Science Acts 등) 및 보조금 지급 |
| 규제정책 방향 | 탈규제                          | 탈규제                           | 규제강화                                                      |
| 정부재정 방향 | 작은 정부,<br>균형재정추구             | 작은 정부, 균형재정추구(DOGE)           | 정부역할 강조                                                   |
| 환율정책    | 강달러                          | 강달러                           | 강달러                                                       |
| 무역정책    | 자유무역                         | 보호무역(관세 부과 및 강화 FTA 탈퇴 및 재협상) | 관세부과유지, FTA 소극적. 현상유지                                     |

4) The Washington Post, July 13, 2017, Trump's MAGAnomics is here. And his team repeated Obamanomics' big mistake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wonk/wp/2017/07/13/maganomics-is-here-and-it-just-made-the-same-mistake-as-obamanomics/>

5) Mick Mulvaney, Introducing MAGAnomics, Wall Street Journal, July 12,2017  
<https://www.wsj.com/articles/introducing-maganomics-1499899298>

| 사이버안보정책         | 민관협력 기조               | 탈규제                         | 정부규제강화<br>(민관협력)                                     |
|-----------------|-----------------------|-----------------------------|------------------------------------------------------|
| 조세정책            | 세금인하기조                | 세금인하기조<br>(법인세 인하)          | 세금인상기조                                               |
| 이민정책            | 적극적 수용                | 통제, 부정적                     | 적극적 수용                                               |
| 국제협력에 대한<br>태도  | 협조적                   | 부정적, 소극적                    | 적극적                                                  |
| 추구하는 국제경<br>제질서 | 자유주의 국제경제<br>질서(시장우위) | 현실주의, 민족주의<br>(nationalism) | 대중국 압박을 바탕으<br>로 한 동맹 중심의 자<br>유주의 국제경제질서<br>(정부 우위) |

표 1. MAGA 경제노선과 워싱턴컨센서스, 바이든노믹스의 비교

MAGA의 세계관의 핵심은 백인 보수주의자 세계관으로 미국이 진보세력에 의해 포위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sup>6)</sup> 진보정치세력은 글로벌리즘을 추구하며 월스트리트 자본에 포획되어 제조업기반인 메인스트리트(Main Street)를 무시하고 등한시 하였다. MAGA 세력은 오랫동안 미국을 세계화와 글로벌리즘으로 추동한 기존대외정책 기득권(Foreign Policy Establishment)에 환멸을 느낀다. 이들은 미국을 위한 공정무역에 걸림돌이 되는 두 가지 도전이 세계무역기구에서 제도화된 불공정하고 비상호적인 무역과 공산주의 중국의 경제적 공세와 세계지배 추구라고 인식한다(Project 2025). 그들은 미국의 영광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외경제정책을 버리고 미국정부가 해외개입을 줄이고 미국 내부의 회복에 집중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제조업이 회복되어야 하고 해외로 나갔던 공장들이 다시 미국 국내로 들어와야 한다. 이에 기반하여 트럼프 1기(America First)와 바이든 행정부(Buy America)에서 “리쇼어링(reshoring)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영국과 미국의 패권의 쇠퇴를 볼 때, 역사적으로 제조업 공동화는 패권의 쇠퇴와 깊은 연관이 있기도 하다(Yoon 1987). AI와 자동화로 생산활동이 이루어질 4차산업혁명의 시대는 19세기나 20세기의 제조업이 국력에 미치는 영향력과는 다를 것이지만, 제조업 부흥이라는 선거슬로건은 최소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그 효과를 보고 있고 무시할 수 없는 선거공약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취임 일성으로 ‘America First’를 강조하며 취임 첫주에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에서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체결한 대외무역협정이었던 TPP(Trans-Pacific Partnership)를 탈퇴하였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중요해졌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주창하며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중국으로 상정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미국은 제대로 중국의 부상에 대해 대응할 수 없었다. 트럼프는

6) Arthur H. Garrison, 2025, AGA and the White Social Conservative Worldview : The Rhetoric That Colonized the Republican Party; Lexington Books/Fortress Academic

2017년 4월 6일에 시진핑을 초청하여 미중정상회담을 개최하며 트럼프 1기에 미중 간 관계가 우호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였지만, 2018년 초부터 대중국 관세를 높이기 시작하였고, ZTE와 화웨이 등 중국의 테크 기업들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작하였다. 더 나아가 2020년 7월에는 스파이 활동을 근거로 중국의 휴스턴 총영사관을 폐쇄하였다. 중국도 미국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고 청두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폐쇄하며 대응하였다. 미중전략경쟁이 격화되기 시작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를 강타하였고 트럼프는 11월 대선에서 패배하였다. 일평생 국제주의자로서 대중국관여정책에 찬성해온 바이든의 당선으로 미국이 전통적인 대중국 관여정책으로의 복귀할 것으로 일부에서는 예상하였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이슈에 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 1기의 정책을 지속하였다. 오히려 대중국 관세를 올리기도 하였으며, 인플레이션 감소법, 반도체 및 과학법 등을 통해 미국의 경제안보정책을 제도화하고 체계화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도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통한 막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한국의 삼성, 현대, LG, 대만의 TSMC 등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미국 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은 미국경제의 시대정신이 되었다.

트럼프 1기와 2기의 차이점 중 하나는 보수 테크엘리트와의 결합이다. 트럼프 2기 MAGA경제노선은 "경제 민족주의와 우파 테크 엘리트의 결합"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Rodrik 2025). 로드릭에 따르면 트럼프 2기 MAGA세력은 크게 네 분파로 나뉘어질 수 있다. 세금인하와 규제축소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공화당원,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제조업 부흥을 기치로 하는 경제민족주의자들,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에 반대하고 깨어있음 운동(wokeism)의 검열 철폐를 주장하는 언론 자유절대주의자(Free Speech absolutists),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 등 트럼프 2기에 화려하게 결합한 자신들의 기술 비전을 추구하는 우파 테크 엘리트들이다. 스티브 배넌(Steve Bannon),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등의 경제민족주의자들과 일론 머스크(Elon Musk), 피터 틸(Peter Thiel)을 위시로 한 테크 우파들은 현재 MAGA에서 한 배를 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              | 경제민족주의자        | 테크 우파        |
|--------------|----------------|--------------|
| 대표인물들        | 스티브 배넌, 피터 나바로 | 일론 머스크, 피터 틸 |
| 제조업 중시 여부    | 제조업 부흥         | AI 기반 유토피아   |
| 정치세계관        | 포퓰리스트          | 엘리트리스트       |
| 정치적 기반       | 일반 시민          | 기술           |
| 이민 정책        | 이민억제           | 이민 환영        |
| 세계화에 대한 입장   | 국지적 사고         | 글로벌 리스트      |
| 실리콘밸리에 대한 입장 | 실리콘밸리 억제       | 실리콘밸리 강화     |

| 부유층에 대한 입장 | 부유층 반대 | 부유층 지지 |
|------------|--------|--------|
|------------|--------|--------|

표 2. MAGA 분파 비교: 경제민족주의자 vs. 테크 우파; 출처(Rodrik 2025), 저자정리

스티브 배넌은 테크 우파에 대한 매우 깊은 불만과 적대감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위 표에서 보듯이 MAGA 세력 내의 주요 두 분파인 경제민족주의자와 테크 우파 간의 차이가 깊고 크기 때문에, 이 갈등은 결국 충돌로서 나타날 수가 있다.

최근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간의 갈등이 부각되고 사그러들기도 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미국의 제3당을 창당하겠다고 하였지만 이러한 변화를 테크 우파의 트럼프 정부에 대한 지지의 근본적인 변화로 연결시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일단 일론 머스크의 제 3당 창당 자체에 브레이크가 걸린 측면이 있고<sup>7)</sup>, 트럼프 행정부의 AI 및 암호화폐 최고감독관 (Cryptocurrency Czar)인 데이비드 섹스(David Sacks)은 테크 인사로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OpenAI 최고경영자인 샘 올트먼 등도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 세력 가운데 있다. 테크 우파에서 상대적으로 대외적으로는 덜 부각되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보다 더 중요한 인물로 평가되기도 하는 피터 틸(Peter Thiel)은 현직 부통령인 JD 밴스와 인연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sup>8)</sup> 오랫동안 민주당 지지였으며 2016년 대선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였지만, 2024년 7월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트럼프 지지로 돌아선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트럼프와 관계의 역사가 짧지만, 밴스와 틸은 훨씬 더 오랜기간 동안 정치적, 경제적으로 두터운 관계를 맺어 왔다. MAGA의 미래인 밴스와 틸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현재 트럼프 2기만이 아니라 미국 공화당에 대한 기술우파의 영향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틸의 제자(Protege)로 평가되기도 하는 마이클 크라트시오스(Michael Kratsios)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AI 전략을 이끌고 있기도 하다.

MAGA 내부의 분파 문제와는 별도로, MAGA경제노선의 미래는 밝지만은 않다. 언급된 내부의 잠재적인 갈등 뿐만 아니라 트럼프 2기의 “황금 시대(golden age)”의 약속은 지켜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주류 경제학자들의 MAGA경제노선에 비판적 시각에 따르면 관세, 이민 제한, 세금 인하 등은 모두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AI와 자동화 시대에 관세 상승이 기대한 것만큼 제조업 일자리를 가져다 주지 못하여 여러 정책

7) The Wall Stree Journal, Aug 19t, 2025, Elon Musk Pledged to Start a Political Party. He Is Already Pumping the Brakes  
<https://www.wsj.com/politics/policy/elon-musk-third-political-party-69bf9bd8> (검색일 2025년 8월 25일)

8)페이팔 창시자로 부통령 밴스가 예일 로스쿨을 졸업하고 틸이 창립한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에서 10년을 근무하고, 1500만불을 지원하여 밴스가 상원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고 그 이후에는 밴스의 부통령 후보선정에도 결정적으로 기여;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Peter Thiel)같은 테크 우파는 첨단기술지상주의자로 평가되기도 하는데, 범용인공지능(AGI)의 선점을 미국 주권의 확장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https://www.usatoday.com/story/news/politics/elections/2024/07/17/peter-thiel-boosted-jd-vance-career/74397520007/> (검색일 2025년 3월 1일)

들의 결과로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경우 MAGA경제노선은 큰 혼란과 전환기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

### 3. 트럼프 행정부의 사이버안보정책과 MAGA경제노선

#### 1) 트럼프 행정부의 사이버안보정책

트럼프 행정부 1기는 2018년 9월, 부시 행정부 이후 15년 만의 정부차원의 종합 사이버 안보 전략인 국가사이버 전략(National cyber Strategy)을 발표하면서 '힘에 의한 평화(Preserve Peace through Strength)'를 사이버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이 새로운 기조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선제방어(Defend Forward)를 공식화하여 미 사이버사령부(USCYBERCOM)가 적성국 네트워크 내부에서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하였고 CISA(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를 출범시켜 연방·주정부, 민간 핵심 인프라를 아우르는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및 대응 허브로 자리매김 시켰다. 트럼프 1기는 보호 대상을 정부 네트워크 및 기간시설에서 미국 사회 전체로 확장하였고 군과 정보기관에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재량을 부여하였다. 이는 "America First"에 기반한 공세적 사이버 억지(deterrence) 모델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sup>9)</sup>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하여 백악관으로 재입성한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3월 19일 국내 사이버안보정책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이 행정명령은 주정부와 이하 지방정부가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한 효율성을 달성할 것을 골자로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퇴임 마지막까지 소프트웨어 공급자들이 사이버안보위협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는데<sup>10)</sup>, 이는 탈규제를 공언한 트럼프 2기의 정책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예상과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취임 첫 주에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80개에 가까운 행정명령을 폐기시키면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사이버안보정책 관련 행정명령은 대다수 그대로 유지하고 폐기하지 않았다.<sup>11)</sup> 5월까지 최소한 3개 이상의 사이버안보에 관련한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행정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였는데, "국가의 사이버안보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 14028, "미국인의 대량 민감 개인데이터와 미국정부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방지"를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 14117, "국가의 사이버안보 혁신을 강화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명령 14144가 관련된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사이버안보 관련 행정명

9) 이경복,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사이버 보안 정책방향 전망; 변진석, 미국 사이버안보전략의 등장과 발전: 역사적 전개와 사이버솔라리움보고서, 평화연구 30(1),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보고서, 2022; 사이버안보연구소([www.ncsl.or.kr](http://www.ncsl.or.kr))

10) <https://www.nytimes.com/2025/01/16/us/politics/biden-trump-cybersecurity.html>

11) <https://www.scworld.com/resource/cybersecurity-in-the-second-trump-term-what-security-leaders-need-to-know>

령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사이버안보전략 관련 행정명령은 지난 3월 18일에 발표된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사이버 공격 및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제14239호와 최근 6월 6일에 국가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해 정선된 노력을 강조하는 행정명령 14306호이다.<sup>12)</sup> 행정명령 제14239호는 사이버 안보 전략의 구체적 내용이 중심이 아니지만, 행정명령 제14306호는 사이버 안보 관련 내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행정명령 14306호는 각각 오바마 및 바이든 행정부의 사이버 안보 관련 행정명령이었던 제13694호와 제14144호를 일부 수정하여 외국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자국 보호를 강화하고 연방 사이버 보안 정책 전반을 간소화하였다. 구체적으로 행정명령 제13694호의 일부를 수정하여 중대하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관한 제재대상을 '모든 사람'에서 '모든 외국인'으로 수정하였고, 기존 사이버 위협국인 중국 이외에 러시아, 이란, 북한 및 기타 국가를 추가하였다. 또한 연방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의 보안증명을 완화시켜 주었으며 연방기관에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을 지시하는 기존 조치를 삭제하였다. 이민이슈와 관련하여 불법 이민자들이 공공혜택을 부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디지털 ID 관련 정책을 폐지하였다 (KISA 2025).

## 2) MAGA경제노선과 트럼프 행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

지난 6월 6일 사이버안보 관련 행정명령 제14306호가 발표되기 전에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사이버안보전략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전임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변화를 일정 부분 예상하였다.<sup>13)</sup> 바이든 행정부는 인터넷 공간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므로 사이버 위협의 비용을 가장 통제력이 큰 주체인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공화당 행정부는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와 규제최소화를 강조해 왔으므로,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 전략에서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공급자에게 무거운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자 한 규제드라이브는 속도조절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사이버 보안 관련기업들에 대한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를 줄여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행정명령 제14306호는 이러한 예상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사이버 안보 분야의 정부 규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12)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6/sustaining-select-efforts-to-strengthen-the-nations-cybersecurity-and-amending-executive-order-13694-and-executive-order-14144> (검색일 2025년 8월 20일); KISA, 2025년 2분기 인터넷·정보보호 법제동향, 2025 Vol. 2. 한국인터넷진흥원

13) The Brookings Institute, Trump 2.0: What cybersecurity shifts lie ahead?  
<https://www.brookings.edu/articles/trump-2-0-what-cybersecurity-shifts-lie-ahead/>

하여 사이버안보 자체의 중요성을 저평가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사이버안보는 당파적 대립을 상대적으로 비껴간 영역으로 트럼프 1기 국방부가 도입한 '선제적 방어(Defend Forward)' 개념은 이미 초당적 합의를 얻어낸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이 모델은 공격자를 "우리 네트워크 경계선에서 기다리지 않고" 적국의 디지털 심장부에서 먼저 교란·무력화한다는 발상을 담고 있다. 미군 사이버사령부(USCYBERCOM)가 해외 기반 인프라 안으로 침투해 악성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거나 디도스 봇넷을 중지시키는 작전이 대표적이다. 바이든 행정부도 이를 유지했고, 트럼프 2기는 오히려 더 과감한 재량을 부여하려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트럼프 2기의 사이버 안보전략은 대외적인 측면과 대내적인 측면으로 종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대외적인 차원에서 트럼프 1기에서 사이버안보 전략으로 확립된 선제적 방어 전략이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으로 트럼프 2기에서도 그 공세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인 차원에서는, 규제 축소를 통해 연방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과 민간 기업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축소와 작전 공세성 유지라는 두 축을 엮으면, 트럼프 2기의 사이버안보 풍경은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 첫째, 연방정부가 민간 공급망에 일률적 '기본값' 보안(Default-Secure) 기준을 강제하기보다는 행정명령 제14306에서 명확해졌듯이 가이드라인·인센티브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둘째, 최근 조직 축소를 겪고 있기는 하지만 CISA를 중심으로 한 민관 정보 공유 구조와 중요 인프라 방어 투-트랙(연방·민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명령 제14239호에 따른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기존 사이버 안보 분야 민관협력의 중심기관이었던 CISA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국의 Salt Typhoon 통신사 해킹<sup>14)</sup>처럼 행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되는 위협 환경이 민관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셋째, 국방·정보 부문에서는 '선제적 방어' 명분 아래 동맹국과의 실시간 작전·정보 연동이 강화될 수 있다. 동맹에게는 더 깊은 네트워크 통합을 요구하면서도, 주권적 사이버 규범 논의에서는 미국 주도의 질서를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 4. 마무리

정책 변화는 이해당사자마다 상이한 함의를 지닌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축소 기조 하에 기업에게는 단기적으로 규제 부담이 완화되는 듯 보이지만, 정부 주도의 안전장치가 줄어들수록 자율적 보안 투자가 생존 조건이 될 것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사이버안보 분담과 관련하여 연방·주 정부와 국회는 초당적 예산 합의를 바탕으로 공급망 보안·사이버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지만, 최근 CISA나 NIST(국립표준기술연구소) 등이 조직 축소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환의 시기가 매끄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동맹국은 미국의 공세적 사이버작전 파트너십 요청이 강화되는 만큼, 법적·정치적 책임

14) Anne Neuberger, China is Winning the Cyberwar,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25, <https://www.foreignaffairs.com/china/china-winning-cyberwar-artificial-intelligence>

분담 구조를 면밀히 재검토해야 해야 할 것이다.

결국 트럼프 2기는 “규제 최소화”와 “공격적 억지”라는 두 축으로 기존 사이버 안보 전략을 재편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Salt Typhoon 사례가 환기하듯, 중국·러시아·북한·랜섬웨어 카르텔은 미 대선결과와 무관하게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 규제가 완화되고 연방정부의 역할이 주정부와 기업으로 이전되었을 때 사이버 안보 수준이 제고될지는 지켜볼 문제이다. 오히려 기업과 개인, 주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동맹국 모두가 스스로 회복탄력성을 높여야 할 필연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긴장 관계 속에서, 미국 사이버안보의 다음 장(章)은 ‘작은 정부’와 ‘강한 방패’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실험이 될 전망이다.

#### 참고문헌

- 김상배, 2017, 사이버안보의 국가전략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8  
2018, 트럼프 행정부의 사이버 안보 전략: 국가지원 해킹에 대한 복합지정학적 대응, 국제·지역연구 27권 4호, 2018 겨울, pp. 1-35  
2019, 사이버안보의 국가전략 3.0,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 30, 사회평론아카데미,  
변진석, 2022, 미국 사이버안보전략의 등장과 발전: 역사적 전개와 사이버솔라리움보고서, 평화연구 30(1),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보고서,  
이경복, 2025,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사이버 보안 정책방향 전망, SW 중심사회 vol.129  
유인태, 2024, 사이버안보와 경제, 김상배 편, 사이버 안보의 국제정치학, 한국사이버안보학회 총서 1, 사회평론아카데미.  
윤민우, 2024, 미국 사이버 안보전략, 정책, 그리고 법률의 발전동향 및 시사점, 가천법학 제16권 제2호  
오일석·조은정, 2022, “미국 사이버전략의 평가와 전망,” INSS 전략보고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4.  
Garrison, Arthur H., 2025, *AGA and the White Social Conservative Worldview : The Rhetoric That Colonized the Republican Party*, Lexington Books/Fortress Academic  
KISA, 2025, 2025년 2분기 인터넷·정보보호 법제동향, Vol 2. 한국인터넷진흥원  
Project 2025, *Mandate for Leadership: the Conservative Promise*, The Heritage Foundation, 2023,  
Rodrik, Dani, Feb 28, 2025, The Coming Showdown in Trumpworld, Project Syndicate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trump-enablers-nationalists-tech-elites-have-conflicting-goals-by-dani-rodrik-2025-02?>

The White House, 2025, Executive Order 14239, 14306

Yoon, Young-kwan, 1987, Political economy of foreign investment and productivity : a historical observation and industrial case studies, Baltimore, Maryland : Johns Hopkins University, 1987

-신문, 주간지 및 계간지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Foreign Affairs*, *Foreign Policy*, *The Economist*,

※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사이버안보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